



발행일 2025년 12월 15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 “노조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노동부 시행령 폐기하라” 민주노총, 정부의 원청 교섭권 보장 없는 노조법 시행령 추진 규탄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하라.”

“개정 노조법 무력화 중단하라.”

“원청교섭 보장하라.”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 취지 훼손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희생을 끝내기 위해 20년 넘게 이어온 노력이 시행령 하나로 부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원청·하청 노동자에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중으로 강제해 오히려 교섭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노조법을 개정한 이유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지 새로운 문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가 ‘의견수렴 기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간 단 한 글자도 바뀐 적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이어 “3월 원청교섭 원년을 열기 위해 반드시 시행령을 폐기시키고 자율교섭권을 쟁취해야 한다”며 연말 투쟁 조직을 강조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가 결정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직접 교섭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앞세워 원청교섭 회피에 길을 열어주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쟁의권을 봉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부위원장은 “원청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개입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며 “원청교섭은 노동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금속노조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6년 3월 원청교섭 체계 안착을 목표로 연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도 ‘모두의 노조할 권리’ 쟁취와 직접 교섭권 사수를 위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 “노동부가 나서서 한국지엠 고용승계 해결하라”

금속노조, 직영 정비 폐쇄·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사태 관련 특별 관리 감독 촉구



금속노조가 정부를 향해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책임지고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지엠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개정 노조법 2조 무력화 지엠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에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지엠 자본은 지난달 7일 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에 발탁채용 계획을 통보한 후, 전국 9개 직영 정비 사업소 폐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비센터와 물류센터가 하나의 사업부 체계로 연동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내 경영 규모를 축소하고 향후 철

수를 염두에 둔 수순이다. 지엠 자본은 물류센터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조직되고 파업에 나서자, 발탁채용을 미끼로 내세우고 계약 해지로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김용태 지엠부품물류지회장은 “지엠 자본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하청업체를 앞세워 노조 와해, 계약 해지, 전조합원 해고까지 밀어붙였다” 라며 “명백한 원청 책임 회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용태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라며 “노동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특별 관리 감독하라”라고 외쳤다.

금속노조 14기 위원장 당선자

인 박상만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엠자본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뒤 철수를 시도하고 있다” 라며 “금속노조 14기를 시작하자마자 지엠자본과의 투쟁이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갈 때 결코 지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윤용신 노조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 직영 정비 사업소 폐쇄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직영 사업소 붕괴이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현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이 무색하게 원청 자본이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라며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만 고용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종물류센터와 정비센터 투쟁은 지엠자본의 횡포에 맞선 최전선의 투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